



변신의 辯

盧 在 植

〈한국환경기술개발원장/대기과학〉

내 삶의 절반보다 긴 세월을 나름대로 정열을 쏟으면서 일 하던 원자력연구소를 떠나 새로 닦을 올린 환경기술개발원으로 옮겼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변신의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나였기에 스스로를 알 수 없는 어떤 야릇함을 느껴보게도 된다. 막상 變身을 위한 최종 행정절차인 辭職願에 서명하는 순간만은 스스로도 기누기 힘든 어떤 충격이 있어 그만 눈시울이 이상해짐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6.25동란이라는 同族相殘의 회오리속에서 받은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했던 학업내용을 내실화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새 학문을 터득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갔다가 돌아와 원자력연구소에 몸을 담게된 것이 막 30대에 접어든 팔팔한 나이였으니 따지고 보면 그때까지의 내 인생보다 더 긴 세월을 한 일터에서 일한 셈이다.

돌이켜보건데 원자력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60년대초의 나는 그무렵 舊소련이 계속해서 실시한 대기권 핵무기 폭발실험 결과 편서풍을 타서 우리나라에 來到한 방사능 낙진의 모니터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물론 모니터링 자체에 그치지 않고 방사능낙진을 추적자로 한 오염물질의 대기 내 거동과 강하메카니즘 究明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곧이어 62년경부터 계획·추진된 원자력발전소 건설, 운영과 관련된 부지·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이 무렵만 하더라도 참으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비유될 만큼 문자 그대로 無에서 有를 창출해 내야 하는 엄청난 시련이 점철된 시절이었다.

그후 73년부터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따른 공해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환경문제까지 연구대상영역이 확장된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의 급진전과 더불어 유발된 환경문제가 도처에서 다양하게 나타남으로써 그때부터는 정말 눈코 뜰 새 조차 없을 만큼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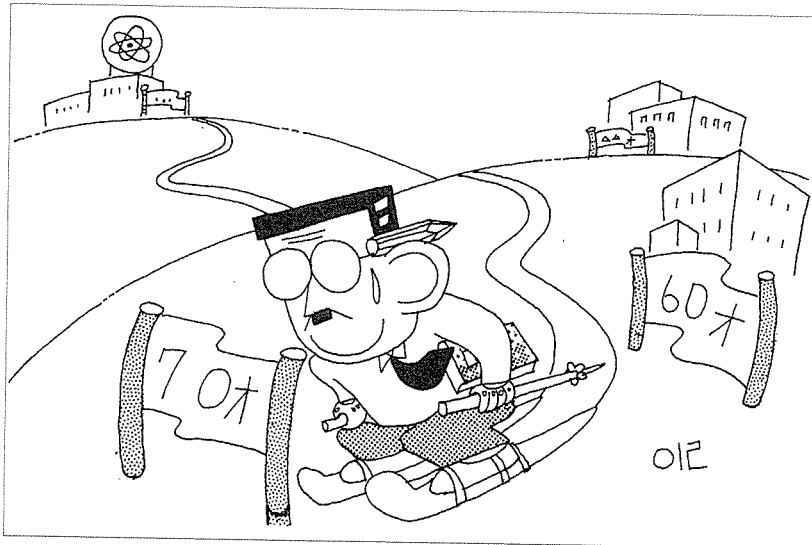
내가 다루는 일의 비뚤 정도가 증폭되는 가운데 환경보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도에 대응하다 보니 감투 아닌 감투도 많이 쓰게 되었고, 24시간으로 짜여진 하루가 너무나 짧게만 느껴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만 7년이라는 세월을 객지인 大德연구단지에서 보내야했던 나로서는 시간의 소중함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거의 모든 중요한 회의나 학술모임이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현실적 사회시스템내에서는 실건 좋건 서울~大德간을 잇는 교통수단내에서 엄청난 시간을 소모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의 消失은 어떤 수단과 재주를 총동원해서도 끝내 되찾을 수 없는 존귀한 것임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현 주소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못 찾고 있고 반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가고 있다. 또 정부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는 날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딱하다. 특히 지난 해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으로 지탱가능한 개발」이라는 이른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汎세계적 환경보전운동의 展開軸으로 삼게 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국제환경문제의 논

의방향과 국내 환경정책방향 설정에 큰 구심점이 되고 있다.

한편 환경기술선진국은 겉으로는 지구환경보전이라는 大義名分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自國에서 개발한 低汚染·無汚染 공정기술 등 이른바 淸淨기술 (Clean Technology)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소위 Green Round라고 일컬어지는 무역규제를 可視化시킬 움직임마저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전공학, 우주과학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미래형 환경기술의 독점적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여건으로 볼 때 자체 환경기술개발이야말로 앞으로의 국내 환경문제 해결의 열쇠 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의한 산업從屬에서 벗어나 국제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을 찾기 위하여 이 일터로 옮기게 되었다고 변명해 두겠다. 각설하고 平硯硯員의 신분으로 소신을 갖고 지낼 수 있었던 지난 30여년간의 연구실 생활이 새삼스럽기도 하다. 그리고 그간 나 스스로가 건의하였거나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나 정책건의중 제도화된 것 등에 짙은 감회를 느껴본다. 가령 오늘날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매우 유효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본과제 연구비를 제도화하도록 제의한 바 있는데, 이 제의가 정책수립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제도화된으로써 오늘날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흐뭇한 여운과 더불어 나를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다.

사실 이 제의를 하게된 동기는 해마다 넉넉치 않게 주어지는 연구비를 과제별로 쪼개서 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배정이 끝나면 털털이가 되기 마련이어서 해당회계년도 중간에

새로 유치된 연구원에게 주어야 할 연구비라든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긴급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가 따로 없는 당시의 여건하에서는 이들 과제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방안이 없어 정말로 딱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오늘날 先任 급이상 연구원 1인당 5백만원에 해당하는 기본과제 연구비가 각 연구소에 배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배정을 제도화하지 않았을 경우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되리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의를 제도화시킨 정부측 고위직 인사의 긍정적이며 결단력있는 책임행정행위가 있었기에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오히려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책임급이상 직원의 정년이 65세로 되어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60세였다. 그래서 간섭(?)이 잦은 정부출연연구기관보다는 간섭이 적은 뿐만 아니라 연금이 있고 노후대책도 보장된 대학으로의 轉職을 고려하는 연구원이 생겼고 실제로 적지않은 연구소의 고급두뇌가 대학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문연구직이건 대학교수직이건 모두 두뇌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모순이며 어딘가 제도적 불공평성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었다. 이것은 최근 들어 오히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매너리즘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 듯 하다.

셋째, 이 제의는 끝내 불발탄이 되고 말았지만 후배 연구원들을 위해 참고로 적어 보겠다. 그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금제도의 신설」 건의였다. 즉 대학교수와는 달리 정부출연연구소 직원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한 일시불 퇴직금만 지불되기 때문에 정년퇴직후의 노후대책을 염려한 나머지 일찌감치 대학으로 옮기는 연구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가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나타남으로써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다.

어찌 되었건 이제 나는 새 일터에 몸을 옮겨 일하고 있다. 미숙한 수준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국내 환경과학기술을 향상 시켜서 관련산업을 유망 수출산업으로 성장·정착케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一助를 하고 싶은 마음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일터로 가꾸기 위해서 신명나는 일터 만들기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할 작정이다.